



[해설] 윤석현의 금감원 대법 판결까지 난 키코 재조사 할까 03



Economy

코스피	2449.81 (-11.57)	코스닥	827.22 (-29.12)
금리 (미국 3개월)	2.31 (+0.03)	환율 (원/달러)	1076.50 (-0.70) (8일)



# 간간해진 감사, 돌연 ‘회계부정 주홍글씨’

## 회계의 회계

### 의견거절 속출

‘지정감사제’ 도입 앞두고 대폭 강화된 감사기준에 상장사 20개사 폐지기로

회계법인들이 감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의견 거절’이 속출하고 있다. 지정감사제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이 ‘자기검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상장사 회계감사가 간간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소·벤처 기업’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상장사는 총 20개사에 이른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성지건설 등 2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에프티이앤이·파티게임즈 등 18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몰렸다. 이는 전년(16개) 대비 4개사가 증가한 수준이고, 2016년(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회계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거절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바로

(2018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관련 내용정리)

감사의견 거절	파티게임즈	성지건설	우성아이비	2016~2017년 상장폐지비율
	엠벤처투자	넥스지	수성	·감사의견 거절 : 65% ·범위제한 한정 : 0%
	디에스케이	카테아	트레이스	2016~2017년 상장유지비율
	감마뉴	지디	세화아이엠씨	·감사의견 거절 : 35% ·범위제한 한정 : 100%
	에프티이앤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2016~2017년 이의신청-상장폐지 소요기간
한정의견 (범위제한)	한솔인터큐브	이에스에이		·평균 : 130일 ·최단기간 : 14일 ·최장기간 : 329일
감사 보고서 미제출	레이젠	모다	제이스테판	2016~2017년 이의신청-거래재개 소요기간
	마제스타			·평균 : 194일 ·최단기간 : 77일 ·최장기간 : 301일

거래가 정지된다. 일단 한정 이상의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회계 쇼크’로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한다.

최근 의견거절이 늘어난 데에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외감법의 핵심은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에 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이른바 6+3원칙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하면 3년은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오고 있는 기업

들은 2020년부터는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이에 회계법인은 지정제 시행 이후 새 감사인이 과거 감사를 문 제 삼을 경우를 우려해 감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약 A법무법인이 적정 의견을 준 바로 다음 해 다른 법인이 한정 의견 이상을 주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국내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연결 회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와 대차대조는 필수적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계 감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 감사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도 의견거절이 많아진 이유다. 외감법이 시행되면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폐지되고 현행 5~7년인 징역기간은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각각 5년과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실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목인·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회계 부실의 책임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지금까지 용인되던 회계처리가 갑자기 ‘불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대표적이다.

바이오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임상 1상에서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임상 3상 이후부터 자산화하는 기업도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모두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았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인 것이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유망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금융감독 본질은 ‘위험관리’ 행정 마무리 수단 돼선 안돼”

독립성 전면 내세워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감독이 행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해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재정립도 예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의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과 원칙론을 꺼내든 것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에 주어진 임무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세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숙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작용으로는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정책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범위의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평화 대통령’ 성공했지만... 일자리 속제는 아직

### 文 대통령 취임 1주년

#### 한반도 평화정책 초석 다져 남북 긴장 완화 전기 마련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쟁기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한지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1주년 전날인 9일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일찍 일본 순방길에 오른다. 3국 정상회담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 등을 마친 후에는 이날 늦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문재인정부 1년 주요일지**



**2017년**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 6.30 한미 정상회담
- 7.6 독일 피르버제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 표명
- 8.2 8.2 부동선대책 발표
- 9.3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NSC 소집
- 9.21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제자 제안
- 11.7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정상회담
- 11.29 북한 ICBM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NSC 소집
- 12.14 중국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

**2018년**

- 1.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및 공동 보도문 채택
- 2.9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방남
- 2.10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방북 초청 전서 전달
- 2.11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삼지연연혁인단 공연 함께 관람
- 2.25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과 접견
- 3.5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파견
- 3.6 대북특별사절단, 4월 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개최 발표
- 3.9 대북특별사절단,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발표
- 3.26 정부 개헌안 발의
- 4.1 평양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한예술단 단독공연 ‘뽕이 온다’ 및 남한 태권도시범단 단독공연 제자 제안
- 4.27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해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보여주듯 단 하루만에 일본 순방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

무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문 겨울을 뚫물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쉽게 달려온 1년이였다”며 “인수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

아 국무위원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과이자 극적인 반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로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을 ‘평화 대통령’으로 칭했다. 취임 후 계속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도 똑심있게 손을 내밀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고, 급기야 김 위원장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갖으면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뒤이어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평가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